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시대에 맞춰 변화해야”

### 민주 김윤덕 의원,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 발의 ‘대상사업 현행 500억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현행 500억 원 이상으로 돼있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1,000억 원 이상으로 높이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고지원이 300억원 넘는 사업에 대해 비용·편익 분석 등 경제성을 조사·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무분별하게 제기되는 사업들을 국가가 통제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도입 이후 30년이 지난 현재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우리나라 경제나 재정규모의 증가를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담아내지 못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가속화시키는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김윤덕 의원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21대 국회 개원 이후 국무총리를 비롯한 기재부장·차관들을 만나 여러 차례 토론과 면담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여기에서 도출한 내용을 토대로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사업 1,0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규모 6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 각각 상향해 법률에 담았다.

그러면서, 1,000억원 이상 예비타당성 조사의 경우 수도권 외의 지역은 지자체장과의 협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또 “평균 조사 기간이

2017개월인 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자침에서 정하고 있는 조사기간인 9개월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며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사업들이 시기를 놓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에 운용자침의 기간을 법률로 상향하고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규정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해당 개정안에 담았다.

김윤덕 의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예비타당성 제도의 본질적 맹점의 개선이 필요했다”며 “지난 30년간 적용돼 온 예비타당성 제도의 순기능도 있었지만, 이제 변화된 사회경제 여건에 맞춘 합리적 근거가 마련돼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대적 과제인 ‘국가균형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예비타당성 제도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세워야 한다”며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체계적인 예비타당성 방법론을 구축해 모범모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유호상 기자

## 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

### “폭염·감염병 관리, 잼버리 성패 좌우”

#### 성경찬 도의원 “전 세계 전복 홍보 기회의 장으로 활용해야”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성경찬(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고창1)의원이 1일 제38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성공개회를 위해 폭염 및 감염병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대회가 열리는 8월 1일~12일은 1년 중 가장 더운 시기이고 잼버리 부지는 바다를 접한 넓은 평지로 높은 온도와 습도로 인해 야영 활동과 숙박이 불편이 우려된다”며 “대회 일정을 단 며칠만 늦추면, 평균 온도가 1도 이상 내려가 더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대회를 개최할 수 있

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뛰어난 인재들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는 자칫 집단감염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질병관리청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위드코로나 시대에 대비할 것”을 제안했다. 성경찬 의원은 “잼버리 대회 성공개회는 전북도를 전 세계에 알리는 매우 중요한 기회이다”며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대회 성공개회를 위한 민간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 “폭염취약계층 지원 실효성 있게”

#### 황영석 부의장 “전기요금 지원 정책 필요”



전북도의회 황영석 부의장은 정책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폭염취약계층 지원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 등 이상기후 현상이 잇따르며, 2018년부터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사회문제로 인지하고,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작년 1월 자연재해대책에 폭염취약계층 관련 사항을 포함해 폭염피해 예방사업 추진을 명시했다. 또, 전북도 역시 지난해 9월 전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를 제정, 무더위쉼터 운영 등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 폭염 등 취약한 주거환경에 놓인 폭염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황 의원은 “경기도의 경우 이미 2019년부터 폭염시 거동불편 등의 이유로 무더위 쉼터 등의 이용이 어려운 노인층을 대상으로 에어컨 설치와 함께, 전기료 부담완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절기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전북도 역시 관련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 “전북도 여성정책 재개편 절실”

#### 이병철 도의원 “독립된 행정기구 개편해야”



전북도의회 이병철 의원은 전북도 여성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북도 여성정책의 개편방향을 제안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 초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9년 지역성평등지수에서 전북도는 중하위권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원인에 대해 전북지역 여성정책을 역동적으로 이끌 수 있는 행정 지원체계 미비, 지역 네트워크 결속력 결여, 관련 기관의 인력 부족 등을 제시했다. 이어, 그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북도 여성정책에 대한 재개편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현재 복지정책의 일부로 치부되며, 여성을 복지와 돌봄의 주체로 한정할 수 있는 우려가 내포된 현재의 행정구조를 벗어나 독립된 여성정책 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전북도의 다양한 여성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여성교육문화센터 내 정책개발 전담 조직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전북도 여성정책이 행정이 의지를 가지고 여성정책 재개편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도청 공연장 관리실태 미흡”

#### 조동용 도의원, 시설 보강·인력 확충 등 제시



전북도의회 조동용 의원이 도청 공연장의 미흡한 운영 및 관리실태를 꼬집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북도 청사 내 두 곳의 공연장이 시설 명칭만 공연장일 뿐, 정작 공연의 목적으로 활용되거나(대공연장), 시설 활용 실적 자체가 절대적으로 적다(아외공연장)는 점이다. 이에 조 의원은 “대공연장은 코로나 이전 2019년 기준으로 연간 158회가 이용됐는데 이 중 공연행사는 5건에 불과하고, 아외공연장은 그나마 공연행사가 추진 하지만 총 이용횟수가 28건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턱없이 부족한 관리인력도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두 공연장에는 총 108종의 음향 및 조명장비가 있는데, 이를 전문적 지식과 기술도 없는 직원 한 명이 다른 업무와 함께 도맡아서 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연장 용도에 맞게 시설 활용도를 높일 것과 대기실·탈의실·분장실 등 마땅한 공연장 부대시설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아외공연장의 시설 보강, 그리고 음향 및 조명장비를 관리 운용할 수 있는 전담인력 확보를 제시했다.

### “도청사 내 주차 부족 방관 안돼”

#### 김희수 도의원, 업무 이양 방법 등 제안



전북도의회 김희수 의원은 “도청사 내 주차 문제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음에도, 주차 공간 마련에 대한 검토 없이, 방관으로 도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청사 내 1245대가 수용 가능하고 이중 민원 전용 7대 공간이 포함됐지만 이곳에서 의회까지 약 2분이 넘는 시간이 소요돼 접근성과 민원도 모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접근성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주차 공간이 부족해 청사 곳곳에 갓길주차와 이중주차가 되고 있어, 청사 전체가 주차장 같고 이는 행사와 회기가 있을 때는 더 극심하다”며 문제를 꼬집었다. 김희수 의원은 “지상과 지하 주차장 확대 등 근본적으로 주차 부족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시간과 방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운동 공간 이전 후 주차장 활용, 청사 주차장 이용자들의 의견 수집, 소형주차장에 소형차의 주차 제한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위한 업무이양과 같은 방법을 제안했다. /유호상 기자



“이번 추경 예산은...” 1일 전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송하진 도지사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설명을 하고 있다.

# “전주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나서야”

### 서윤근 전주시의원, 시의회 5분 발언서

전주지역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전주시의회 서윤근(우애·2동, 호성동) 의원은 제38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전주시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시설 지원기준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가법게 무시되고 있다”면서 해당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밝힌 한국장애인주거보호협회의 전국 시·도별 지자체 인력지원 현황을 보면 전북과 전주시는 지자체 인력지원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이런 상황 속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시설장이 되지 않으면 한 달만 일한지 3급에 머물러야만 하는 상황이다. 사망감을 유지하지 않는 한 평생 직장이 되기 어렵다는 얘기다.

서 의원은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원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직책보조비, 대체인력, 시간외수당 등은 전주에서는 먼 나라의 얘기라곤 존재한다”면서 “전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길은 멀어보이지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용인시의 경우 시간외수당 등의 처우개선을 넘어 장기근속자 유급 안식휴가제를 도입했고, 경기도는 관련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며 “전주시 역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이용자 종사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복지도시’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성 기자

## 추경안 등 심의... 정읍시의회 임시회 개최

정읍시의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정읍시의회(의장 조상중)의 제287회 임시회가 1일 개최됐다. 의회는 오는 14일까지 일정으로 임시회를 개최 제2회 추경안과 28건의 각종 민생안건을 심의·의결한다.

2일부터 이틀간 정읍시의 주요사업현황을 방문해 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펼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건, 2021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의 건,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

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이 처리됐다.

또 이상길 의원 박일 의원, 이도형 의원이 나와 5분 자유발언을 펼치기도 했다. 먼저 발언자로 나선 이상길 의원은 “정읍의 역사·문화·교육의 중심지 조산동에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제안했다. 조산동 뿐만 아니라 정읍시민들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읍의 남서쪽을 총괄하는 거점형 행정복지센터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어 박일 의원은 “동화농민역명기념일(5·11)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따른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발언에 나섰다. 우리나라의 달력 제작 기준인 율령요항에 동화농민혁명 기념일이 정읍시 공휴일 지정사항으로 기입될 수 있도록 할 것과 이에 맞춰 시와 시의회는 물론 관내 공공기관과 학교, 기업 등이 휴무·휴업을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도형 의원은 “경로당 지원 8대 품목에 가로막힌 소파 지원 필요하다”는 주제로 발언을 이어갔다. 인식문화가 정착되어 있고 퇴행성관절염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 경로당 지원 8대 품목에서 빠져 있는 소파를 정읍시 경로당에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어업환경 조성, 지역 해양환경 고려해야”

### 나기학 도의원, ‘양식어업 신규개발 제한’ 지침 개정 촉구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 상황으로 급변하고 있는 해양환경을 고려해 지자체 중심의 어업환경 조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나기학 의원(군산1)은 1일 제384회 본회의에서 양식어업 신규개발 제한하는 ‘변화양식장이용개발계획기본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나 의원은 “해양 및 어장 환경이 날이 변화하고 있지만 정부의 해양·수산정책이 이러한 변화에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최근 군산시의 경우, 이러한 지역 어장환경 상황을 반영해 새로운 양식품종 개발을 통한 안정적인 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해수부의 관련 양식어업에 대한 신규개발 금지 정책으로 인해 신제품 개발 노력이 허사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기학 의원은 “지역의 해양환경과 어업인들의 수요 등에 민감하게 대처하고, 정책 추진의 동력을 지닌 곳은 지자체에도 사실상의 어업면허를 중앙부처가 관장하고 있는 지금의 정책기조가 지속된다면, 현재 쇠락을 거듭하고 있는 어촌·어업의 침체는 더욱 가속화 될 것임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변화 및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중심의 연안환경을 고려한 어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어업인들의 소득증대 및 귀어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양식어업 신규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변화양식장이용개발계획기본지침’의 관련 규정의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